



이라크 사태를 보며

에너지안보를 생각한다.

글 · 김진우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라크 사태가 안정되고 중동지역이 평화를 회복하기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미국에 의해 종전은 선언되었지만 이라크 반군의 저항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공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되는가 하면 바그다드 도심 호텔에 로켓탄 공격이 가해졌다. 자살 폭탄 테러는 이라크 여기저기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미군 뿐만 아니라 이라크 주둔 외국경찰도 습격을 받고, 파병 예정국에 대한 무차별 테러도 예고되고 있어서 관련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라크전의 발발과 이후 계속되는 혼란은 주로 정치·군사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겠지만, 그로 인한 중동지역의 불안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다.

최근 OPEC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평균 배럴당 25달러 수준의 비교적 높은 목표유가 전략을 채택한 이후 유가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24일 OPEC 총회 직후 상승한 유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두바이유 현물시장가격이 유가밴드 최고가격 수준인 배럴당 28달러 안팎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2002년 이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한 러시아와 카스피해 주변국 등 비OPEC 산유국의 생산량이 늘고 있어서 OPEC의 감산정책에 대응하여 유가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미국 주도로 이라크 유전이 조속히 생산을 회복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서방 석유메이저의 이라크 석유산업 진출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이라크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할 것은 재편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계 석유시

이라크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은 재편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계 석유시장의 판도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이라크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라크 유전 복구와 함께 석유산업의 재편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장의 판도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이라크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라크 유전 복구와 함께 석유산업의 재편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OPEC 산유국은 국영회사 체제를 유지하며 수익의 대부분을 단순 원유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신규 유전개발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석유산업의 민영화와 상류부문에 대한 메이저의 자본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유입과 첨단생산기술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석유제품 판매는 대부분 메이저 등 민간석유회사가 주축이 되어 왔으며, 1990년대 장기간의 저유가 상황에서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특히 하류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새로운 수익모델의 확보를 위하여 30년 만에 중동 재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의 석유산업 개방에 대한 제약요인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이라크에서 기존의 이권을 확보하고 있는 유럽 및 러시아 석유회사와 미국계 석유회사와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유럽 석유회사들이 기존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 중동지역의 정치적 갈등과 종교분쟁으로 인한 지역갈등도 석유산업 개방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자생력을 갖춘 국영석유회사를 중심으로 하류부문의 인수합병을 통한 수직통합의 구조개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계 석유메이저들의 염원이 달성되는 시기는 국가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중동지역의 상황변화에 따라 늦추어질지도 모른다. 더욱이 최근 이라크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중동의 석유시장 개방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든다. 전쟁을 방불하게 하는 혼란상태에서 이라크 석유산업의 개방이 원활히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서방 메이저의 진출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상황진전에 따라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이라크 석유산업의 개방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과거 사담 후세인도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석유개발만이 이라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체제 하에서 친 이라크 세력을 대상으로 석유시장 개방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 점이 미국과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정세를 좌우하는 현 상황에서 이라크 주권 이양의 시기와 모양이 어떻든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산업 개방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든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도 전후 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하여 대규모 유전개발이 불가피하며, 이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중동 국영석유회사와 서방 석유메이저가 양대 산맥을 이루어온 소위 하이브리드(hybrid) 모델은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계 석유시장은 조만간 큰 지각변동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우리는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뜨겁다. 파병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도 몇 차례 논란이 거듭되었고, 지금은 파병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국가적, 정책적 판단이 따르는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에 대한 정책판단의 기준이 우선 정립되었더라면 논란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미국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피고 국내여론에 따라 파병 여부나 규모, 성격 등이 사뭇 흔들리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라크다가는 파병으로 인한 부담은 막대하게 지면서 결국 국익은 실종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미국은 이라크 반군의 강력한 저항과 이로 인한 희생, 미국 국내외의 여론과 부시대통령의 대선전략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서 이라크 주권의 조기이양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우리의 파병과 이라크 석유시장 진출을 직접 연계하기는 어렵지만 파병문제가 에너지안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설령 기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속내를 드러내어 파병의 의미를 왜곡시키거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지역에 우리 군대를 보낸다는 건 많은 국가적 부담과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다. 이렇고도 향후 이 지역에서 일어날 석유개발붐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면 미국 주도하에 시작한 이라크 전쟁의 뒷정리에 우리가 희생만 치른 모양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물론 파병을 경제적 시각에서만 볼 수는 없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라크의 전후복구와 사회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외교적 관계와 함께 경제적 실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요즘의 국제관계이다. 이라크 석유산업의 민영화 실현될 경우, 아직까지 미개발 유전이 많이 남아있는 이라크 남서부 지역 유전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야 하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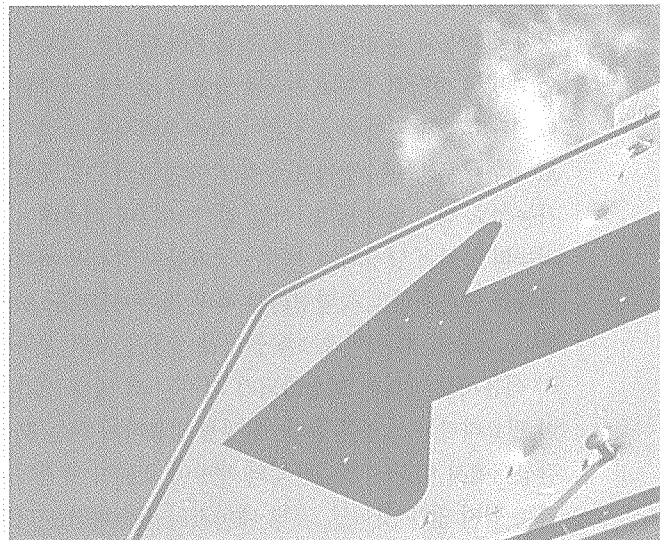
한편,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관계도 원만히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국제적 사안에 대해 미국과 교감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한쪽만을 생각하다가 다른 한편과 감정의 골을 만드는 것은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석유수입의 중동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아랍권과의 관계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라크 사태와 석유시장 불안이 우리의 에너지안보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산업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중의 하나는 대외개방형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해외자원개발 확대와 자원외교 강화로 요약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유전개발투자는 크게 위축되었다. 갑자기 불어닥친

유동성 위기와 환율인상으로 인해 진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상당부분 중단, 또는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는 이후 외환위기가 극복되었지만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수입의 10%를 해외개발을 통해 수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재개발 뿐 아니라 에너지의 안정적, 경제적 확보를 위한 전략 프로젝트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자원외교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동향 파악과 외교적 대응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IEA, APE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강화와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체계적 확대뿐 아니라, 각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나 에너지실무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양자간 에너지협력을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중동 석유산업 진출이 당장 가시화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동 산유국, 카스피해 주변의 중앙아시아 산유국과의 양자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며, 아프리카 유전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중동지역 석유산업의 지각변동



우리 입장에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에너지안보뿐 아니라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협력사업이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협력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주변지역과의 협력관계 강화와 개발역량 제고를 위해 힘은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시장정보 수집과 분석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조직과 인력 양성을 통해 협력추진의 기반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원유의 안정적 확보가 긴요한 우리 입장에서 중동 석유시장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동북아 에너지협력이다. 이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에너지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를 잇는 네트워크형 에너지공급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은 에너지 대소비국과 대규모 자원부국이 공존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에게 경제적 편익이 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석유 소비에 있어서 일본이 세계 2위, 중국이 3위, 한국이 6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3개국이 세계 에너지의 약 17%를 소비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 지역은 세계 에너지 자원 부존량중 천연가스 33%, 석탄 32%, 석유 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 에너지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주요 에너지소비국의 에너지수급구조가 취약하여 다각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대해서는 그간 국내에서나 관련국들간에 논의가 있어 왔지만, 아직 기초적인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각국의 명확한 입장이 표출되지 않고 있다. 우리 기업도 러시아의 석유개발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이나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며, 민간부문에서도 사업진출 여건을 분석하는 등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입장에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에너지안보뿐 아니라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협력사업이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협력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역내의 에너지공급망 연결사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부수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동사태 진전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에너지여건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근의 석유시장 불안을 에너지안보 강화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정부와 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적극적인 노력만이 해결책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